황홀한 무등산 눈꽃터널 지난 8일 광주에 내린 '첫눈'으로 무등산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9일 산행객들이 나무에 눈이 쌓여 만들어진 '눈꽃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예비타당성 통과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설여부·건설방식 논란 여전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방식과 과정이 주목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둘러싸고 지상고가 방식이냐 또는 지하 경전철, 노면전철 방식이냐를 둘러싸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상고가 vs 지하철 vs 노면전철**=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지상고가 형태의 도시철도가 도심미관 등 광주 미래의 도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41.5㎞에 이르는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을 '땅에 기둥을 세우는' 지상 고가 형태로 건설할 경우 도심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철로 건설하면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광주시도 한때 도시철도 2호선을 현재 운행되는 1호선처럼 지하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당 1000억원대로, 총 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포기했었다.

■ 도시철도 2호선 계획 노선도

시내버스처럼 지상에서 운행되는 노면전철도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교차로가 많은 국내 교통실정을 감안하면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의 방식은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이 가능하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다면 2호선 건설방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론**=일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도시철도 부채와 운영적자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호선 강행은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은 물론 도시철도가 도시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다"며 2호선 신설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보다는 1호선에 대한 평가와 지방 재정 건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면 총 사업비 1조7394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조436억4000만원을 제외한 6957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시비로 조달해야 한다.

강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골고루 분산투입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했었다.

강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일단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던 것은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외에 지역 SOC 및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3년째 대거 누락…광주·전남 국고예산 확보 전략 바꿔라

핵심사업 3~4개 선택, 집중 공략을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3년 연속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대거 누락되거나 미반영되는 사태가 빚어져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는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안에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정치권 공조 체제 강화도 시급

◇**선택과 집중**=전남도가 9일 지역 국회의원에 제출한 '2011 국고 건의 전라남도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고 요청 건의액 1조1681억원 가운데 반영액은 7200억원에 그쳤다. 전체 요구액의 38%에 이르는 448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국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국회 추가 반영 사업으로 SOC 확충, 에너지 및 신소재, 친환경 생명산업, 녹색체험관광 육성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 의료 환경 및 복지기반 마련 등 54건, 1조3863억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정부안 65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증액 사업인데도 우선 순위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지원 요청 사업 14건과 증액지원 사업 5건을 선택, 절반 이상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둬 전남도와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예결위원 보좌관은 "당시 의원실을 찾아온 전남도 관계자에게 '이같은 예산 증액은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꼭 반영해야 할 사업 3~4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조 체제 강화**=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체제도 보다 강화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신규사업 '끼워 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에서부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 정부안에 지역 현안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남도나 광주시가 정부안에 반영돼야 할 현안 사업을 수시로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지방선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광주·전남지역 국고 확보 노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등 여권과의 보다 원활한 접촉도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예산 지킴이로 맹활약했지만 국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 및 여권과의 소통 창구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등 자치단체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 아래 전략을 짜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러지고 찢어지고…국회 난투극 법정으로?

고소·고발 이어질 듯

3년째 되풀이된 연말 '폭력국회'는 올해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고소·고발 난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 사무처는 9일 전날 피해상황 집계에 착수했으며,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난무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험한 꼴을 봤다"며 피해상황을 열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우리 당의 많은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상황을) 취합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전날 충돌에 따른 피해 집계에 나선 가운데, 현기환 의원은 지난 7일 한 민주당 의원이 던진 의사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날 충돌 과정에서 한나라당 여성 당직자 2명은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회 의원은 "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먼저 5~6차례 나를 가격해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나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문제, 원점으로 돌아가나 진보연대 '연결통로' 입장 철회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와 관련해 '일부를 헐고 연결통로를 내자'는 의견을 냈던 광주진보연대가 입장을 철회해 별관 보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진보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결통로' 보존안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안돼 지역 사회에 혼란과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시도민대책위 참가 성원들과 시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시도민대책위 참가 성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연결통로' 보존안을 서둘러 제안해 논의 과정과 합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오류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난 7월, 54m에 이르는 도청 별관 건물 가운데 왼쪽 24m를 철거하고 나머지 30m 부분만 보존하는 부분보존안을 발표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는 '5·18사적지원형보존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는 9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부분보존안을 수정해 전체 4층 가운데 3층까지만 철거하고 4층 부분은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로 남겨두자고 제안했으며, 이 안은 사실상 최종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광주진보연대가 이날 기존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